

수도권에서 도내 전역까지 1시간대 접근 가능

이원택 “도민 삶에 고속철도 놓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발 수서행 KTX 신설
정읍역 KTX 등 추가 정차
임실역 KTX 정차 등 추진
익산역 광역환승 구축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철도망 전면 확충을 통해 수도권에서 도내 전역까지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불균형이 도민들의 교통과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는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안은 △전주발 수서행 KTX 신설과 전주역 주차장 확충 △정읍역 KTX·SRT 추가 정차 △임실역 KTX 정차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 빠르고 편리한 철도 이용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주역은 수서행 전라선 KTX 10편을 신설할 계획이며 현재 전주시민이 수서까지 가려면 2회 운행되는 데 그쳐 열차 좌석 구하기도 어렵고 익산역까지 가서 수서행 SRT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각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는 사실상 서울 상급 병원을 이용하려는 중증환자와 가족들의 셔틀열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용 수요가 많고 운임도 비싸며 소요 시간이 길어서 환자 가족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전주역의 경우 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에서 철도 정책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재 울산행 고속철 중 서대전을 경유하는 주중 4편, 주말 6편을 일반반에서 고속선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는 “그렇게되면 운행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주말 기준 6편을 12편으로 증편시킬 수 있고 전주시민 1인당 약 50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주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건립도 추진하면서 현재 638 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해 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한된 입지여건을 극복하고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정읍역은 KTX와 SRT 각각 10편씩 추가 정차시켜 2회 철도 요충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KTX와 SRT 각각 상하행 14편

과 18편이 정읍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지역 주민과 인근 시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읍역을 고창·부안·순창은 물론 전남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며 “내장산과 선운산을 축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고 기대했다.

임실역도 마찬가지로 임실군의 연간 생활인구는 250만여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인근 장수와 순창 주민들 35만여 명이 장거리로 장거리인 수요이며 치즈와 산다 축제 등 임실의 4계절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수요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역의 경우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해 도내 철도 이용 체계를 전면 개선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버스과 일반열차, 고속철 간 환승을 하나로 연결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환승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김제, 부안, 완주, 군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역은 버스나 일반열차를 이용해서 바로 고속열차로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승센터에 컨디션과 관광 기능을 결합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원택 후보는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북 14 개 시군이 소외되지 않는 철도 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우고 아스투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자동차, 항공, 연구개발(R&D), 그린 파트너십 등 다양한 양측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한 EU대사와 그린 파트너십 확대

김윤덕 국토부장관, 자동차·항공 등 협력 방안 논의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우고 아스투로(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자동차, 항공, 연구개발(R&D), 그린 파트너십 등 다양한 양측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측은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통해 정책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지속가능 모빌리티 분야의 공동 관심사항과 협력사업을 도출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주제는 제3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 △글로벌 이슈 △탄소 중립, △교통수단별(육상/철도/항공) 정책소개 및 토론 등이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EU는 탄소감축,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며 항공안전·교통관리 분야 상호 정책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중심으로 국제 연구기관이 EU의 다년간 R&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국제 연구개발 협력도 진행 중이다.

EU측은 자동차 분야 및 항공분야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자동차 및

국제항공분야에 있어 한국은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로 향후 항공안전은 물론 환경·미래 모빌리티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 대화, 연구 협력,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통분야에서도 국제 공동연구 및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과 자동차 안전기준 등 분야에서 한-EU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그간의 항공안전과 항공교통관리 분야의 협력이 의미 있다”고 언급하며, “친환경 항공정책, 지속가능항공연료(SAF)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울터 EU와 연구개발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기존의 도시혁신·친환경 건축물 분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탄소중립 도로교통 등 탈탄소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희성기자

비상 경제 대응 행정력 집중

도, 이번주 주요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주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일정을 공개하며 전북도의 비상 경제 대응과 전북발전을 위한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철주 대변인은 지난 2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주요 도정 일정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30일 오전 조준필 군산의료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기존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재임을 거쳐 조준필 원장의 3년 연임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전북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30일 오전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긴급태 기업유치지원실장, 도청 4개 TF 담당과장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기금, KOTRA,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통해 중증 전염으로 호르



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비상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내 일선 현장에서는 등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출 물류비 지원 요구 등 주요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나프타 원료가 수입되지 않아 석유화학 공장이 멈춘 문제로 쓰레기봉투 사재기 등 생활물가 문제와 식품 패키징 분야의 영향 확산 가능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도내 외 방위산업 얼라이언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이 추진된다. 농정 분야에서는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황양택 농업인 단체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기존 농정 거버넌스를 확대해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및 기관 협력도 이어진다. 31일에는 삼성과의 사회공헌(SR) 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청년 희망 투여와 희망 다짐들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같은 날 전북대와 미국 퍼듀대와의 공동연구소 개소식도 열린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4월 1일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유지 추진 위원회’가 출범한다.

주요 현안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과 정읍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물용 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최근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또한 현대자동차 투자가 관련해 오는 31일 전북도와 기업 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투자 이행 상황 점검이 진행 된다. /안민호 기자

자립 추모공원 유가족들

상여 시위... 지자체 책임 촉구

전주 자립추모공원 피해 유가족들이 유골 관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27일 대변인단 명의 보도 자료를 통해 자립추모공원 유가족들이 상여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날 자립추모공원 현장에서 ‘유골관리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상여를 직접 짊어지고 전북특별자치도청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도청 앞에 도착한 이들은 침묵시위를 통해 지역 정치권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유골 관리 책임 인계서’를 제출하며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고인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소원지를 묶은 ‘추모의 바람(유리 풍경)’을 설치해 역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 22일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사제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간담회는 김선민 국회의원 주재로 열렸으며, 영취산 재단법인의 100억 원대 불법 선분양 사기 의혹과 재산 은닉 등 기획 사기 정황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1년 반 이상 사태를 방치해 온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안을 ‘사회권 정책 마켓’과 온라인 플랫폼 ‘직설’을 통해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고인을 존엄하게 추모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 사회권”이라며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현직 시장, 욕설·폭언... 즉각 공개 사과하라”

나인권 김제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정성주 김제시장을 향해 욕설과 폭언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주 시장이 공공장소에서 경쟁 후보인 자신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즉각 공개 사과하고 협박장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7시경 김제 시내 한 장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인회 어른들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올라 나 예비후보가 인사를 하던 중, 정 시장이 뒤따라 버스에 올라와 “어떤 놈이 내 욕을 하느냐”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과 폭언을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언행을 보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시장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도 현장에서 ‘기만하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적 발언을 했다”며 “김제 지역에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협박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적인 시민들에게 욕설 문자가 전달되는 등 협박 정황이 이어지

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민주적 선거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 후보는 “경쟁 후보를 향한 욕설과 폭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협박장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성주 시장은 김제 시민의 명예에 상처를 준 데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당 주장과 관련한 정성주 시장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만호 기자

“법조계 현재 전주 이전 제안에 환영”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해야”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한 여성 안심·행복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여성친화도시 시 제도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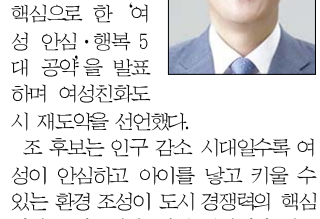
국주영은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주영은 예비후보가 헌법 재판소 전주 이전 추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국주영은 “국주영은 지난 27일 입정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북지역 법조계가 제안한 이전 촉구 성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이전이 전주의 헌법·인권적 역사성을 재정의하고, 전북에 민주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익산 여성 안전·삶의 질 향상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5대 공약 발표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약에는 △공공안전후조원 건립을 통한 출산 지원 강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무상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대응과 돌봄을 연계한 여성 통합 안전망 구축 등이 담겼다.

조 후보는 특히 경찰청장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AI·디지털 교육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